

# 2022년 교육부·복지부·여성가족부 업무계획<sup>1)</sup>

대외홍보팀

중앙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육아지원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다.

교육부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주요 업무계획은 '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정상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실패 회복, 유아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아동의 안전을 위한 다부처 중점 협력 구축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 및 보육관련 업무와 관련된 주요 업무계획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 질벽 해소,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구축, 영아기 투자 강화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육아지원관련 추진계획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및 지역돌봄 강화를 통한 돌봄공백 해소를 요약될 수 있다.

## 1. 교육부

2022년 교육부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 모색, 국가 교육위원회의 출범으로 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융합형 정책 추진을 업무추진 목표로 수립하였다(교육부, 2021: 7).

유아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의 본격적 추진',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의 두 가지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본격적 추진'은 코로나19 이후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지역돌봄 기관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여 교육 활동의 정상화와 포용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의 주요 업무 내용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실패 회복,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 안전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다부처 협업체계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본고는 각 부처에서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 자료를 요약·발췌하였음(교육부(2021), 2022년 교육부 업무추진계획 자료집, 보건복지부(2021), 2022년 교육부 업무추진계획 자료집, 여성가족부(2021),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추진계획 자료집 참고).

〈표 1〉 '22년 교육부 유아교육 관련 핵심추진과제

핵심추진과제	내용
교육활동의 정상화의 집중적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나은 일상을 향한 학교활동 재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등 포함 전국 모든 학교 정상등교 실시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li> <li>- 방과후 학교 정상운영 및 초등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확대</li> </ul> </li> </ul>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의 본격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돌봄교실(700실), 지역돌봄기관 확대로 초등돌봄 수요 대응</li> <li>-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지원</li> <li>-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유치원 방과 후 참여 대상 지속 확대</li> <li>- 신체·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놀이실험터 운영</li> <li>- 유아학비 및 교육급여 인상 등 학부모 학부 부담 완화(유아학비 3년 연속 2만원 인상, 저소득층 교육급여 평균 21% 확대 등)</li> </ul> </li> </ul>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강화, 기본급 지급 인상('22년 74만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 등 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li> </ul> </li> <li>• 현장밀착형 다부처 중점협력의제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신체·정서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위한 제도개선과제, 협업사업 발굴 등 추진</li> <li>-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식생활 안전, 디지털 안전 등 생활 속 안전 관련 과제 종합 조정·관리</li> <li>- 국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 소외집단 사회적 기본권 보호·강화방안 마련</li> </ul> </li> </ul>

자료: 교육부(2021).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pp. 10-19 일부 내용 요약·발췌

## 2. 보건복지부

2022년 보건복지부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포용적 사회안정망 공고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제고를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6).

아동 및 보육 관련 업무는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소득지원 확대', '돌봄 보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의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에서는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차원에서 영유아 검진 후 사후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구강검진 추가 실시 사업 등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지원 확대'에서는 장애아동 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돌봄보장 강화'에서 보육 관련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 보육이용률 40%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신축, 지역아동센터 공적 돌봄기관 기능 강화 등 초등 학생 돌봄 질적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위기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예방·발견·보호·사례 관리 연계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 결정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서는 영아기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22년 1월 이후 출생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지급,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임산부 가정에 전문인력 파견, 난임 시술부 지원 등 임신, 출산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3.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가족부는 추진 업무 목표로 사회 전반 성평등 문화 확산 필요, 젠더폭력 대응 사각지대 해소 필요, 가족구성 및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 아동·청소년의 안전망 강화

필요 등을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6).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업무는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의 핵심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관련된 주요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표 2〉 '22년 보건복지부 아동 및 보육 관련 핵심추진과제

핵심추진과제		내용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검진 후 사후관리 대상 확대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 70%)</li> <li>-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3 → 4회) 및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속</li> </ul> </li> </ul>
소득지원 확대	중증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장애등급제 폐지 3단계로서 '소득·고용지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수당 인상(중증+2만원, 경증+1만원) 및 지원대상 확대(15.0 → 16.1천명)</li> </ul> </li> <li>• <b>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 → 공공보육이용률 40%</li> <li>- 소규모 어린이집 간 협력 모델(다(多)가치) 확산 및 교사 전문성 강화</li> </ul> </li> <li>• <b>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축(총 1,268개소 목표) 및 틈새돌봄 제도화</li> <li>- 지역아동센터공적 돌봄기관으로서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40 → 50%) 확대 및 시설 개선·특성화 운영 지원*</li> </ul> </li> </ul>
돌봄보장 강화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예방·발견-보호-사례관리 등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내실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아동 예방·조기발견: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개입체계 본격 가동</li> <li>- 보육·교육기관 중심으로 확대 위기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현장관찰이 강화되도록 지자체-교육기관-경찰 등 연계 강화(월 1회 회의 원칙)</li> <li>-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가정형보호 우선조치 결정 및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친가정과 유사한 지원 확대</li> <li>- 사례관리 강화·인프라 확충: 학대 피해가정에 심리 케어 등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운영(1,000가정), 아동 보호 시설·인력 지속 강화</li> <li>-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 구축</li> </ul> </li> <li>• <b>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양부모 결정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확대</li> </ul> </li> </ul>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영아기 집중투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아기 투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만남이용권: '22.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li> <li>- 영아수당: '22.1월 출생아부터 만 0-1세 가정양육 아동 대상 매달 30만원 지급</li> <li>-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 → 만 8세까지 확대</li> </ul> </li> <li>• <b>임신·출산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초기 건강관리: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li>-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지방이양 및 모니터링 체계화</li> <li>-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동시개정 추진, 개정 전까지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 관리</li> </ul> </li> </ul>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pp. 12-23 일부 내용 요약·발췌

발표하였다. 취약가정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도록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양육

공백을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전달체계 효율적 개선 등 전반적인 지역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 '22년 여성가족부 아동 및 가족 관련 핵심추진과제

핵심추진과제	내용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서비스 지원 강화	- 청소년부모 지원: 청소년 부모 대상 학습, 상담 및 법률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1인 가구 지원,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가족 다양성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p>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이행 강화</p> <p>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p> <p>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양육공백 해소</p>	<p>- 일하는 한부모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한부모가족시설 기능 개편 등</p> <p>- 양육책임 이행 강화: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p> <p>-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지원, 생활전반 1:1 심리상담 지원</p> <p>- 가족센터 통한 학교급별 부모교육 및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p> <p>-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다문화가족 차별요소 없도록 다문화영향평가 근거 마련 추진</p> <p>- 취약계층 지원 확대: 돌봄 취약계층 의료, 방역에 대한 지원 강화</p> <p>- 공공, 민간 돌봄체계 통합, 관리,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p> <p>- 전달체계 효율적 개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이웃간 돌봄품앗이 구성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지역 돌봄 체계 강화</p>

자료: 여성가족부(2021).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pp. 14-15 일부 내용 요약·발췌